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미래 - 바람직한 통일국토 건설전략 -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I. 서론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격랑 속을 향해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줄다리기가 본격화 하고 있고, 비핵화와 미사일 시스템의 해체 움직임과 함께 유해송환 프로세스의 진행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합의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도 가속화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넘어 한반도 정세와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하고, 남북 화해와 공존을 통한 평화정착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미 정상회담과 이를 전후한 양측의 관계개선 움직임은 북한의 핵 폐기와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맞바꾸는 방안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다. 일찌감치 북·미 정상회담 물밑 조율을 위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걸 허용 하겠다”(5월13일 폭스뉴스 인터뷰)고 밝힌 건 대표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은둔 국가가 21세기로 나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국 기업은 수천만 달러를 투입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에 줄 선물보따리는 품목과 물량이 점점 늘어나는 형국이다. 단순한 대북지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경제적 보상이 거론된다. 특히 수교상 황까지 내다볼 수 있는 국면이 될 경우 평양 대동강변의 트럼프 타워와 평양 시내 맥도날드 매장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센토사 정상 회담을 통해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핵화 문제에 미흡

한 합의였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을 스마트한 지도자로 연일 치켜세웠다. 비핵화합의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란 기대감도 드러났다.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싱가포르에서의 회담 직후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번째 회동을 갖고, 곧이어 중국과 마주한 북한의 북부 접경 지역을 찾아 ‘경제 살리기’ 현지지도로 벌이는 등의 장면을 연출했다. 북·중 전통 관계를 강조하고 중국의 대북경제 지원 카드를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의 대미 협상입지를 높이려는 의도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과연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을지 하는 대목에도 세기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격변하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 속에서 바람직한 남북 교류협력 시대의 청사진과 추진 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II. 본론

1. 변화의 바람 부는 평양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의 격변 속에서 평양의 엘리트·부유층과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리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평양을 다녀온 한 교포 인사는 “지난해 핵과 미사일 도발로 초래된 제재국면에서 한껏 움쭉렸던 북한의 신홍자본가인 돈주와 특권층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귀띔했다.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지고 개혁·개방을 향한 물꼬가 트일 경우에 미리 대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장마당을 무대로 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게 평양을 중심으로 번지는 식도락 문화다.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중심으로 생활형편이 나아지면서 외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기관·기업소가 들어찬 평양 중심가엔 요즘 '한 딸라' 식당들이 등장해 성업 중이라고 한다. 김정은 시대 들어 조성된 뉴타운인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에도 각종 식당이 즐비하다. 53층 주상복합 건물을 비롯한 이 지역 고층빌딩에는 모두 600여 개의 식당이 들어서 성업 중이라고 한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커피를 즐기는 문화도 퍼지고 있다. 과거엔 외교관·주재원 출신이거나 해외 유학경험이 있는 이들이 주로 호텔이나 외화식당에서 제한적으로 커피를 맛봤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학생·청년층이 커피 소비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얼마 전 김일성대 앞에 들어선 현대식 건물엔 커피숍만 무려 8개가 오픈했다”며 “평양에 불고 있는 커피 바람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돈주들은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말 '경제개발구'로 지정한 평양 강남군 일대는 주목받고 있다. 평양 중심부에서 서남쪽 강변에 자리한 강남군 일대는 아직 미개발지대로, 논밭과 과수원이 대부분이라 평양 시민들에게 과일·채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마치 1970년대 서울 압구정이나 개포 지구와 같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강남 개발구는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만든 이래 22번째의 구역 지정이지만, 지방이 아닌 평양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북한은 경제개발구를 '다른 나라의 투자를 끌어들이 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특구'라고 설명한다. 향후 외자유치를 통한 평양판 강남 신도시 개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건 이런 배경에서다.

이 곳이 각광받게 된 건 북·미 관계의 진전이 급물살을 타면서다.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지어지고, 맥도널드가 진출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대동강변 강남경제개발구에 조성될 뉴타운이 각광을 받게 됐다는 얘기가. 이미 평양을 두고 외신 등에서는 뉴욕 맨해튼과의 합성어인 '평해튼(Pyonghattan)'이란 말까지 나온다. 김정은이 강남경제개발구를 지정한 걸 두고서도 미국과의 유희모드 선화를 결심하면서 대북투자 유치를 겨냥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 평양 주민들이 받게 될 충격을 완화하고 미국 기업이나 인력의 대북진출 초기 적정수준의 통제를 위해서도 평양 중심가보다는 특구 성격의 강남개발구에 유치하려 할 것이란 해석이다.

2. 낙후된 경제현실에 실망감 드러내는 김정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은 눈길을 끈다. 6월 말 이후 지방 현지지도에 집중하며 공장과 기업소·협동농장 등 경제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이 생산시설 관리 부실이나 지배인을 비롯한 간부들의 태도를 문제 삼아 역정을 내는 일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평안북도 신의주화학섬유공장에 들린 자리에서는 “마구간 같은 곳에 현대식 기계를 들여놓았다”고 질책했다. “술한 단위들에 나가보았지만 이런 일꾼들은 처음 본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했다. 김정은의 이 같은 행보는 백두산이 있는 양강도 삼지연군을 거쳐 함경북도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어졌다. 어랑군에 짓고 있는 어랑천발전소 현장을 방문한 그는 “도대체 발전소 건설을 하자는 사람들인지 말자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고 격노했다. 북한 관영 매체들도 이런 분위기를 전할 정도로 상황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절대 권력자인 김정은이 직접 현장에 나가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북한 경제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얘기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간 김정은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가 얼마나 북·미 간 합의와 비핵화 이행에 성의를 보일 것인지를 판단한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다. 김정은은 스스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과거를 걷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서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며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예전과 다른 변혁의 길을 갈 것임을 예고했다. 비핵화 약속 이행뿐 아니라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생 문제 등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조치들을 취할 용의가 있음을 공언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즉각 취하기 전에 지방 경제현장을 돌아보는 행보를 이어갔다. 그리고 경제실정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김정은이 잇단 외유를 통해 확인한 국제사회의 발전상과 북한의 열악한 현실 사이에서 엄청난 괴리를 느낀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전야에 싱가포르 야경을 돌아본 뒤 “오늘 참관을 통해 싱가포르의 경제적 잠재력과 발전상을 잘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귀국(싱가포르)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을 많이 배우려 한다”고 말했다. 세 차례 중국 방문 과정에도 김정은은 첨단 산업시설 등을 돌아보며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 노동당 핵심 간부들을 중국에

보내 개혁·개방 현장 학습을 진행하게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의 경제난은 김정은 체제 들어 나타난 게 아니다. 김일성 주석 집권 말기인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에다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까지 겹쳐서, 이미 빈사 상태였다. 개혁·개방을 택한 중국은 아직 북한에게 의미 있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 처지가 못했다. 북한은 5년마다 열어야 하는 조선노동당 대회를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 이후 개최하지 못하는 형국에 처했다. 노동당이 국가경제계획을 제대로 제시하기 힘든 상황에 봉착한 때문이다. 1993년 12월 열린 당 6기 21차 전원회의에서는 제3차 7개년 계획 실패를 자인해야 하는 막다른 길까지 몰렸다.

이런 상태의 경제를 넘겨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겐 험난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은 북한 체제가 곧 몰락할 것이란 예견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혼란을 던졌다.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될 수준으로 모든 게 비정상적이고, 언제 추락하거나 불시착해도 이상하게 없을 것이란 말까지 나왔다. 여기에서 김일성 사망 이듬해부터 연이어 닥친 대홍수와 이로 인한 식량난과 경제위기에 휩쓸려 허우적거려야 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포함한 고위 탈북 인사와 우리 대북 인권·지원 단체 등은 당시 200~300만 명의 주민이 굶주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북한 당국도 당시를 ‘고난의 행군(行軍)’이라 부를 정도다.

김정일은 2002년에 북한관 경제개혁 구상인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김정일식 경제개혁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물가·임금 체계와 중앙집권적 경제 체제에 수습을 가한 주목할 만한 정책변동이란 점에서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 식량 부족과 계획경제 체제의 붕괴로 인해 노동당의 배급망이 미비되는 등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웠다. 여기에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연합기업소 수준의 생산 단위는 물론 전기·철도·항만 등 인프라가 제구실을 못했다.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인한 해외시장의 위축과 중국의 불확실한 지위, 그리고 ‘팍스아메리카나’로 불린 미국 패권주의가 횡행한 국제정세는 북한의 입지를 더 좁게 만들었다.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호전적인 선군노선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반감을 샀다. 2006년 10월 1차 핵 실험으로 노무현 정부는 대북 유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북한을 감싸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펼쳤던 정책은 한국 국민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반감을 샀고, 유엔 제

재 국면에 한국 정부도 적극 동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듬해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이 이뤄졌지만 국민들의 대북감정은 상당히 싸늘해진 상태였다. 임기 말 북한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지원 등을 합의해준 10.4 선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여론은 한국 내에서 보수정부의 출현이란 상황으로 이어졌고, 북한에 대한 보다 깐깐한 정책과 접근방식이 등장했다. 북한에게 ‘달콤했던 10년’이 끝났음을 의미했다.

3. 김정은 개혁·개방 나설 수 있을까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담판까지 벌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승부수는 일단 담대한 듯한 모양새를 드러내고 있다. 조명록 특사를 워싱턴까지 보내고도 좌고우면하다 실기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스타일이 달라 보인다는 평가다. 김정일 위원장도 1997년 8월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을 백년속적으로 보려 하지 않으며 조·미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김정은의 경우 한 발 더 나아가 직접적인 화법과 노골적인 구애 제스처로 트럼프의 심기를 파고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잇단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워싱턴 타격을 위협하던 김 위원장은 올 들어 대미접근 쪽으로 급선회 했다. 일단 국제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김정은이 짝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김정은이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과 정상화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는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서 드러난다. 지난 7월 6~7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통해 전달한 친서에서 김정은은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24일 전 싱가포르에서 있던 각하와의 뜻 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은 참으로 의미 깊은 여정의 시작으로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이어 “나는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각하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이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트럼프를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와의 추가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모양새다.

김정은의 정책노선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건 2013년 3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경제·핵 병진노선’이다. 핵 보유로 재래식 무기인 전차와 함정·전투기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생겼으니, 이를 인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사회보장에 투입하겠다는 논리였다. 1960년대 김일성이 주장한 '경제·국방 병진정책'의 재탕이란 비판도 제기됐지만, 김정은식 병진정책에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니다. 북한 당국은 "조국 수호전과 경제강국 건설을 동시에 다 같이 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란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핵 개발을 전제로 내세운 병진노선은 한계가 분명했다. 중국까지 동참한 강력한 대북제재망은 경제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한 북·중 변경무역까지 틀어막아 버렸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폭주는 지난해 11월 말 '국가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북한 곳곳에선 대북제재의 고통을 호소하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북한은 5년 만인 지난 4월 병진노선의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다. 한국과 미국 등을 겨냥한 유화정책을 펼치며 핵 노선을 고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였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이 마련된 싱가포르의 화려한 야경은 김정은과 그의 참모들의 뇌리에 생생하게 각인됐을 게 틀림없다. 개혁·개방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중국의 번창을 벌써 3차례 이어진 방중 일정을 통해 김정은은 확인했다. 전용열차로 북·중 변경을 넘어 북한 땅으로 넘어오며 목도한 피폐한 경제 실상에 번뇌했을 공산이 크다. 개방과 국제화라는 도도한 세계사의 흐름 앞에 노출된 김정은식 생존전략은 이제 진실의 순간을 맞았다. 개혁·개방으로 번영과 공존을 택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기약 없는 은둔과 고립의 질곡에 빠져드느냐 하는 문제다.

4. 금강산·개성 시동 가는 정부

개성공단 재기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시동을 걸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갈 길이 멀어보였지만 본격적으로 추진해 볼 만한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합의까지 성사되면서 정세가 화해와 협력 분위기로 급선회한 상황에 힘입어서다. 청와대는 물론 통일부·외교부 등 대북 부처들은 개성·금강산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한 정책 검토와 준비를 조심스레 진행 중이다. 여기에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회담이 착착 진도를 내고 있고, 북한 지역 철도와 도로를 보수 또는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시간표를 구체화 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는 120여개에 이르던 입주기업들이 가장 다급하게 목소리를 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미온적이던 통일

부 등 관련부처는 최근 들어 재기동 쪽으로 분위기를 탐색하는 모습이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통일부가 공단재개의 '당위성'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나서는 등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다. 대규모 현금(bulk cash)이 관광대가로 건네진다는 점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7년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 경비병에 의해 금강산 현지에서 피격 사망하는 사태로 중단된 터라 재개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 측 자산인 금강산 관광 시설과 이산가족면회소를 몰수·동결 하는 조치를 취한 것도 우리 측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일단 금강산 이산 상봉을 계기 삼아 현지의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관광 재개를 위한 애드벌룬을 띄워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개성공단 재기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구상이 성사되면 무엇보다 대북제재 문제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재차 연장하고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등 해제 쪽으로는 당장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직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다.

정부는 일단 북·미 논의를 지켜보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대북제재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적 사안의 경험이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하지만 자칫 민감한 이슈인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지나치게 부각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적절한 수위를 고심 중인 모습도 드러난다.

III. 결론

남북화해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잇단 핵과 미사일 도발에 전쟁위기가 지 느끼고, 김정은과 북한 체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우리 사회를 사로잡았던 상황에 비쳐보면 놀라운 변화다. 이 같은 열기를 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과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쟁겨야 할 점도 몇 가지 있다.

첫째는 거대담론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어젠다의 제시다. 그 동안의 통일논의나 준비는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개괄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다보니 정작 남북통일 과정에서 맞닥트릴 여러 문제에 대한 연구나 해법은 미흡했다. 이젠 통일을

위해서는 정말 꼼꼼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할 국민 공감형 로드맵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통신체계와 기기를 쓰는 남북한 핸드폰은 어떻게 통하게 할 수 있고, 컴퓨터·핸드폰 자판은 통합을 어찌할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구호나 말보다는 행동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한다. 중장기적인 구상이나 대책 없이 일회성 이벤트나 캠페인에 머무는 통일준비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손에 잡히는 통일준비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셋째, 남북관계나 대북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남북 간 화해와 교류협력이 지속 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지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화합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등이 지난한 과정을 요구하고 있고,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만만치 않은 형국으로 전개될 거시란 점에서 통일을 향한 우리의 결연한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통일 미래세대라 할 수 있는 청소년·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과 다양한 관련 체험활동을 적극 마련하는 게 요구된다. 이와 함께 세대 간 통일인식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통일문제와 관련한 세대 간의 이념과 가치관 격차를 줄여나가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통일은 우리 경제와 기업이 새로운 도약을 꿈꿀 수 있는 기회이자 블루오션이다. 분단으로 인한 유형·무형의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분단 유지에 투입해야 했던 돈과 사람을 경제로 돌리는 과정이란 의미도 있다. 제주에서 백두산 삼지연을 잇는 국내선 항공노선이 생겨 통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여름에는 삼지연의 자연휴양림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제주에서 휴가를 즐기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다. 초코파이와 라면 같은 식품이 2500만 북한 주민을 새로운 시장 고객으로 맞고, 스타킹과 일회용 생리대, 콘돔 등이 불티나게 팔리는 때가 온다면 어떨까. 독일 통일 당시 동독 주민들은 가장 먼저 중고차를 사 통독지역 여행에 나섰다. 통일 한국 초기 중고차 딜러들은 어떨지 전망을 해보는 건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일은 논리적 추론이나 공식에 의해 그 시기나 방식을 예측하기는 사실상 힘든 일이다. 통일독일도 마찬가지였다. 동서독 시기 분단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門)을 두고 독일의 폰 바이체커 대통령은 “브란덴부르크의 문이 닫혀있는 한 통일의 문을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통일을 향한 이런 집념이 독일 통일을 일궈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지만

준비 없이 맞는 건 재앙일 수 있다. 어느 날 문득 다가올 통일을 반갑게 맞이하려면 치밀하고 끈기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